

22대 국회는 인구문제에 진력하라

아침을 열며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하는 전환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 특히 지방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비를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지난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OECD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2010년 이후부터 역대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백조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합심해서 추진해 달라는 총론적 주문을 하고 싶다. 그 위에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민·관 총력체제가 가동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에게는 모처럼 찾아온 최초의 ESG 경영사제가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지방의 인구감소인데, 간접적으로나마 이에 간여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다. 일자리도 없고, 교육·의료·문화 등의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방에 거주하는 상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 판단한다. 특히 젊은 층은 떠나가고, 노인층만 남아 고령화만 심화되고 있다. 지방 가운데서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호남지역이 더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기지역' 중 전국 228개 시·군·구의 80% 이상이 영·호남지역에 입지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전남은 22개 시·군 중 18곳이, 경북은 23개 중 19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계인구'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자체가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상기 2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른바 '관계인구'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관계인구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나 사회활동, 주말농장이나 여가 기타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외지인, 로컬에서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 지역에서 인생2모작을 실현하고자 하는 귀향희망자들을 의미한다. 강조컨대, 이들 관계인구를 창출하여 이들과 연결과 교류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야말로 기존 정주민구 확대정책이나 교류인구(여행객) 유인책에 보완하여 지역에 새롭게 활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지역이 뿌리인 출향민에 주목하고 싶다. 일본 홋카이도 시모가와마치(下川町)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가칭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특산물을 직송하는 '고향회원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마을에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萬里長城遊歩道'(실제 2km)의 석축 도로를 만들기 위해 귀성객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고향 돌살기 날' 이벤트를 개최해 '주민이 직접 만든 일본 최초의 관광자원'이 완성되어 많은 관광객을 창출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제 지방에서는 기존의 인구유입과 관련한 여러 시책, 사업들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관계인구 창출 확대 정책 등을 서로 통합·연계한 '지역 활성화 그랜드 플랜'을 짜고 실행해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한다. 지자체의 슬기롭고 창의적인 기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社說

정쟁 끝내고 피폐한 민생 회복 힘 쏟아야

특권·반칙 등 반성도 필요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책을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중요성 만큼이나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됐다.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의 박수를, 패배한 후보에게 위로의 인사를 보낸다. 모두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의 길을 완주했고, 스스로의 믿음을 지켰다.

하지만 선거과정은 막판까지 실망과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다. 여야 모두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막말과 혐오, 상대를 헐뜯는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가짜뉴스를 포함한 인신공격도 다반사였다. 21대 국회에 이어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또 다시 등장해 '의원 꺾주기' 등 꼼수도 재현됐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이 형편없었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도 사라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 주어진 책임과 과제는 크고 막중하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기와 급격한 과학기술

의 발달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정책을 만드는 것은 22대 국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다. 노동법부터 기업 규제와 환경 정책까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 복지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도농 격차 등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흔들리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이번 총선 잠정 투표율은 67%로 지난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 높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절망감에 대한 국민의 채찍이다. 정치권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쟁을 끝내고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도 복원시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후보들의 특권과 반칙, 수많은 흠결들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은 정치를 잘하고 미더워서가 아니라라는 것임을 정치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법정부 지원 필요한 광주 AI 2단계 사업

윤 대통령 "국가 AI 쫓기" 신설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사업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도 크게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인공지능(AI)·AI 반도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AI위원회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매우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고, "대통령 주재 국가 AI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광주 AI 2단계 사업 즉시 추진이 가결되기를 희망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1단계(2020~2024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AI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2단계(2025~2029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의 AI 집적단지 조성 계획은

혁신적 발상이었다.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 11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신청받았다.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관행대로 SOC 사업을 신청했지만, 광주시만 유일하게 R&D 사업인 'AI중심 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혁신적 발상을 통해 광주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광주시의 'AI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와 2023년까지 총사업비 4116억 원을 투입해 AI 생태계를 조성했다. AI사관학교를 통해 인재 육성도 앞장서고 있다. 광주가 한국의 AI의 중심이 된 이유다.

4차 산업은 세계 각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만큼 광주의 AI 집적단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돼야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 주재 국가 AI위원회 출범이 기대되는 만큼,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광주의 미래가 인공지능 산업 성패에 달려 있는 만큼,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4·10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부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유권자의 높은 투표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역대 총선 때와 다름없이 네거티브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높였다. 지역 곳곳에선 후보자 간 비방과 고소·고발, 흠집내기가 선거기간 내내 이어졌고, 중앙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망언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우리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음을 다시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광주·전남에선 대부분 현역 물갈이가 이뤄졌다. 당선인들은 이제 곧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원회가 배정되면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를 각오를 다질 것이다. 이들 당선인에게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그 어느때보다 크다. 당부하건대 당선인들 모두 출마를 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간절한 바람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 각종 SOC 사업 등 산적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 호남의 새로운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대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거센 물갈이 민심 속에 광주와 전남 현역들이 경선 과정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렇다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현역 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초선 일색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호남정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선인들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어떻게든 국회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호남정치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고, 지역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지역민들이 18명의 광주·전남 당선인에게 거는 한결같은 기대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